



AI와 우리의 미래

모두 함께 공유하는 AI를 위한 정책적 제언

- 03 들어가며
- 04 AI 혁명의 시작
 - 인공지능의 약속
 - AI가 주는 기회, 그리고 난제
 - 적극적인 정책 비전의 필요성
- 09 AI 인프라 및 혁신 투자
 - R&D 및 AI 인프라 투자 강화
 - 혁신 친화적인 법제도 구축
 - 강력한 통상 및 투자 정책 수립
- 15 인력 개발 및 AI 활용 인재 양성
 - AI 시대에 맞춘 교육제도 현대화
 - 직업 전환을 돕는 AI
- 20 AI 도입 확산 및 접근성 강화
 -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AI 활용 및 도입 확대
 -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AI 사용 지원
 - AI 활용 및 도입에 친화적인 법제도 및 지원시스템 구축
- 25 맺음말 : 모두를 위한 AI와 국가의 역할

들어가며

우리는 지금 AI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 기술의 초기 단계인 지금 이 시기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의 각 사회에서의 AI 기술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공동체의 이익, 인력 개발, 경제, 공중 보건 및 글로벌 발전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AI가 향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와 이익에 관심을 집중할 때입니다.

AI는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물론 AI를 대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은 안전한 미래를 위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 줄 혁신의 도구로서 AI의 긍정적 잠재력에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보건 및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시기입니다. 모두를 위한 AI, 그리고 이를 통해 약속되는 더 긍정적인 결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책적으로는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법과 제도 개혁을 통해 AI 혁신을 지원해야 하고, 둘째,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중소기업 등 사회 전반의 각 분야에서 AI가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의 혜택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AI를 어떻게 활용하여 새로운 과학적, 사회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AI 혁명의 시작

인공지능의 약속

역사적으로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대한 혁신과 기술적 변화의 순간들은 우리의 생활, 업무, 교류 방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문자의 발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소통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바퀴의 발명은 운송과 교역을 가능하게 했으며, 증기기관은 산업화를 촉진하여 도시와 신산업의 성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AI기술을 통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I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능력을 보조하고 강화시키며, 우리의 **생활, 업무, 학습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 - 소통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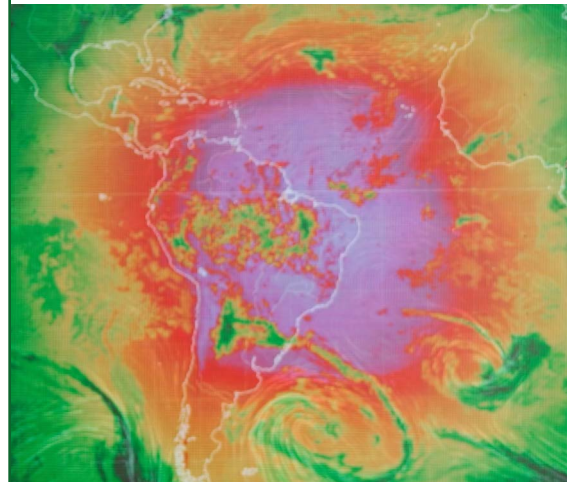
구글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선 추적 기술은 신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시선으로 화면의 글자를 선택해 단어를 입력할 수 하있게 는 기술인데, AI의 도움으로 시선 감지 기술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 사용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의 시선 추적 기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재난 예보

구글은 AI를 활용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 생태계 보호, 재난 대응 등의 영역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홍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산물 경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화재가 어떻게 확산될지 예측합니다. 또한, 지붕에 빛을 반사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도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획기적 개선

구글은 AI를 활용하여 교통 및 에너지 부문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으며, 항공 분야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는 콘트레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질병 진단 및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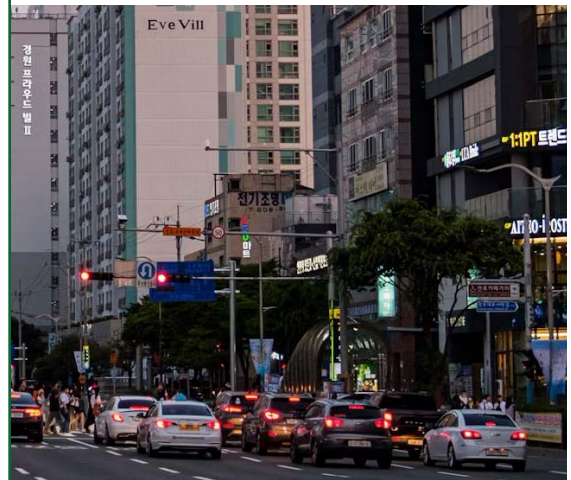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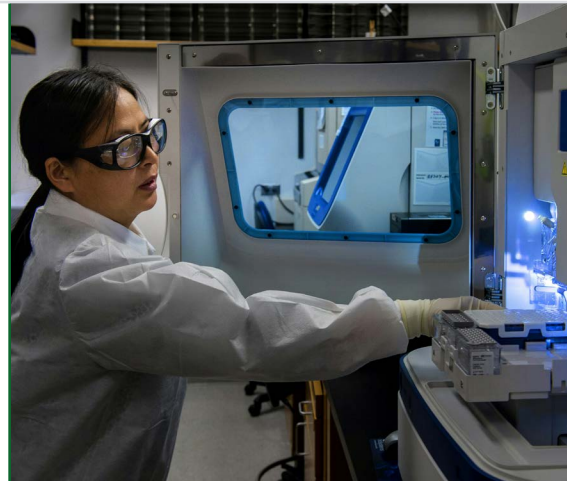
구글의 AI 시스템은 훈련을 통해 사람(의사)이 놓칠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검출 가능하도록 진단 정확도를 높입니다. 예컨대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로 훈련된 모델은 수천 개의 익명화된 유방촬영술 이미지를 분석하여, 전문가들이 놓칠 수 있는 암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인간의 물리적 역량을 확장시켰듯, 지금의 AI는 우리의 사고와 업무 방식에 새로운 차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는 2억개 단백질의 3D구조를 밝혀내며 생물학 연구를 가속화하였고, 이는 신약 발견, 말라리아 백신 개발,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을 반영한 ‘인간 범유전체 참조 지도(human pangenome reference)’는 보다 정확한 유전자 검사와 치료법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시스템들은 공중 보건, 환경 보호, 국가 안전 등에 있어서도 정부의 목표 달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신호등 패턴 최적화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 일상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편의성 개선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패턴 최적화

AI를 활용해 신호등 패턴을 최적화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차량의 불필요한 정차와 재출발이 줄어들어 연료 소모도 감소되고 탄소 배출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통체증을 줄여 탄소 배출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공중 보건 개선에서부터 생활 수준 향상, 경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다양한 중요 과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이제 막 AI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을 뿐이며, 앞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AI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I가 주는 기회, 그리고 난제

과거 기술 발전의 경험에서 보듯, 기술의 혜택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제로서 사람들이 그기술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기술은 혜택과 동시에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AI 역시 인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많은 난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AI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칠 영향력이 어떠한지, 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AI가 환각현상을 보이고, 허위 정보를 전파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의 발전 단계에서 동반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모두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I의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신중하고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AI가 인간의 가치를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AI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AI의 건전한 발전을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들이 AI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면서 AI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OECD, UN, G7 같은 국제기구도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AI 산업계에서는 이미 책임감, 보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AI 원칙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며 이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AI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보장: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우선으로 하여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 공정성 유지: 다양한 사용자 집단에 공평하게 AI 기술이 적용되도록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 투명성 증대: AI 작동 원리와 데이터 사용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 사용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를 준수하는 AI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 책임성 강화: AI 시스템의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관리를 강화합니다.

위와 같은 안전장치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AI의 변혁적 잠재력을 국력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비전을 자신있게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각층에서는 정부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토대로 각 부문에서 가능한 최선의 혁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적극적인 정책과 비전의 필요성

AI의 최대 잠재력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어떠한 국가, 산업 또는 기업도 혼자 AI의 미래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AI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 협력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인프라 및 혁신 투자**

AI 연구개발과 디지털 인프라, 글로벌 컴퓨팅 역량에 투자하고, 아이디어 및 데이터를 새로운 발견, 제품,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인력 개발 및 AI활용 인재 양성**

학생에서 노동자, 중소기업에서 전통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사람들이 AI를 이해하고활용하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 **AI 도입 확산 및 접근성 강화**

건강한 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활용하여 주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AI의 혜택을 널리 공유해야 합니다.

AI 인프라 및 혁신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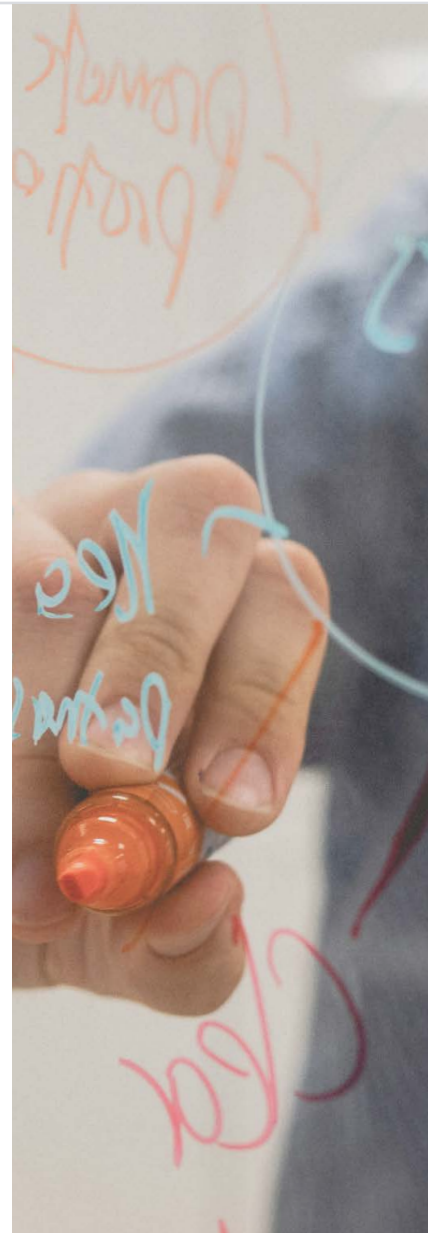
인력 개발 및 AI 활용 인재 양성

AI 도입 확산 및 접근성 강화

AI 인프라 및 혁신 투자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활용해 생활 수준을 높인 국가들이 번성해왔습니다. 이처럼 AI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AI의 구축 및 개발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와 민간부문은 AI의 연구, 개발,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능력, 데이터 등의 인프라 구축은 지금까지 주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는 AI 혁신의 혜택이 특정 국가, 도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이 협력하여 **AI 연구를 위한 글로벌 자원(GRAIR, Global Resource for AI Research)**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는 AI 인프라 투자를 넘어서 연구자 및 혁신가들이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새로운 제품,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 친화적인 법제도**가 구축되어야 AI의 전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AI는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기술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은 데이터 이동(data flows)과 같이 AI에 필수적인 국제적 협력을 지원하는 **강력한 무역과 투자 정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AI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투자 전략 강화 - 모든 연구자들을 위한 AI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대한 가장 최적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의 필요충분 조건이 된 시대가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AI 시대에 들어선 요즘에는,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획기적 민관 협력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AI연구 분야의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즉, 연구자들이 AI 혁신을 이끌고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정부로서는 가능한 많은 기업과 개발자가 AI 도구를 이용함에 걸림돌이 없도록 실질적,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략의 핵심은 국가 또는 지역과 같은 대단위에서 첨단기술(그래픽 처리 장치, 슈퍼컴퓨터 등)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집약적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대규모의 리소스를 구축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AI 개발에는 대규모의 리소스가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라는 점을 생각해볼때,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로 구축된 대규모 리소스를 기반으로 할때만이 민간 부문의 혁신과 연구개발 촉진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인프라와 리소스를 집약시킬 수 있고, 그와 같이 집중화되어 대규모로 구축된 리소스를 공유함으로써 비로소 AI 연구 생태계를 획기적,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 제도, 펠로우십, 연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계와 시민사회의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모든 노력은 학계와 기업의 전통적인 참여자들을 넘어서, 국가와 글로벌 커뮤니티의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며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AI 연구자원(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제안을 통해 자원 구축의 중요 단계를 밟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영국은 AI 컴퓨팅 능력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도 국가적 AI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국가 AI 연구자원(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국가 AI 연구자원(National AI Research Resource)은 AI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과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AI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포괄적인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정부와 학계,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립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적 AI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의 국립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Singapore, NRF)은 국가 연구, 혁신, 기업 정책을 이끌며 미래 경제를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NRF는 연구 및 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펀딩을 제공하며,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과학 및 기술 혁신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및 디지털 모범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로 설정하고, R&D와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1) 세계 최고 수준의 R&D 허브 구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2)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R&D 시스템의 혁신, 그리고 3) 도전적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기술을 미래 핵심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목표로 집중 투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데이터 기반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균형을 맞춘 생태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구자와 기업이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5종의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을 공개하고, 누구나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I 연구자와 스타트업이 보다 안전하고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도 도입하여 제한된 안전환경 내에서 기존에 사실상 제한되었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친화적인 법제도 구축

AI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는 AI의 혁신적인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위험과 잠재적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는 AI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안전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후죽순 고안된 파편화된 규제들은 장기적으로는 AI가 보여주는 무한한 가능성, 즉 새로운 암 치료법을 발견하며, 경제를 폭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수십억 명의 삶을 작은 비용으로 개선하는 등의 장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되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다 줄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AI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균형적, 통합적으로 조율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행동강령 (G7 Hiroshima Process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에서부터 백악관의 행정명령에 이르기까지, AI 거버넌스에 있어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생성형 AI의 영향 확대에 복잡해진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정부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협의회는 AI 분야별 최고 전문가 23인과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구성되어, 국가 전체의 AI 혁신 방향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또한, 국내 100여개 이상의 초거대 AI 기업 및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민·관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AI 연구자와 혁신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 규제 등 중요한 이슈에서는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여러 부서 간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대표적 예라 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협력체계를 통해 통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특정 이슈에 대한 일관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부처가 협력함으로써 과학기술, 개인정보, 인권 등 여러 이슈가 균형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AI 모델이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이 다양한 정보 및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 즉 사용자, 과학자, 연구자 및 창작자 등이 함께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기술의 발전에 친화적일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AI와 같이 수시로 변화하는 혁신 부문에 있어서는 규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혁신을 저해할만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신속히 파악하고 정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를 정비할 때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 완화의 효과를 미리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통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통상과 투자 정책 수립

국제통상 및 투자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방안은 고안하여 실시할 실익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AI의 중요성은 투자 부문의 전략에 있어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자명한 근래의 상황에서는, 글로벌 인프라 구축이나 다국적 투자 파트너십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협력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국가간의 통상, 투자의 규제를 정비하여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 거래 및 협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강화되면, 대륙 간 AI 인프라 구축이나 해저 케이블 설비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활성화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 있는 국가 간 호혜적인 데이터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이동은 다양한 인구학적, 지리적 데이터 셋을 활용함으로써 AI 시스템의 유용성과 관련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들이 한국어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마련되면, 각 AI가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며, 한국어가 기반으로 된, 한층 더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 관련 국제표준을 수립하는데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G7, OECD, ISO 등 많은 국제기구들은 AI 개발을 안전하게,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과 관련 원칙, 기준, 표준 등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과 같은 다양한 국가들 역시 조화롭고 합리적인 AI 규제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AI 기술 사용을 취지의 새로운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 규범과 국내 규제를 연계하여 AI 규제 및 기술 표준을 구축하게 되면, AI 관련 법규에 있어 국가간 정합성,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가간에 예상되는 AI 관련 투자, 계약의 체결, 이에 대한 해석, 학술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확보와 해석, 더 나아가 예상되는 각 부문에서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와 연구에 대한 안정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범적 기초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국제표준은 그 정의자체로서 국내수준에서의 합의만으로는 유의미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AI와 기술에 대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 과정에서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 규제적 상호 운용성, 무역 장벽 최소화, 그리고 차별 금지 등 전통적인 통상 원칙을 AI 기술의 책임성과 윤리 기준에 연결 지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동등성 인정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동등성 인정 대상국 선정과 대상국의 보호수준 검토 등을 통해 국가 간 상호운용성 확보.
 - >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국외로 이전하여 AI 모델을 훈련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AI로 처리되는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를 구축.

AI 인프라 및 혁신 투자

인력 개발 및 AI 활용 인재 양성

AI 도입 확산 및 접근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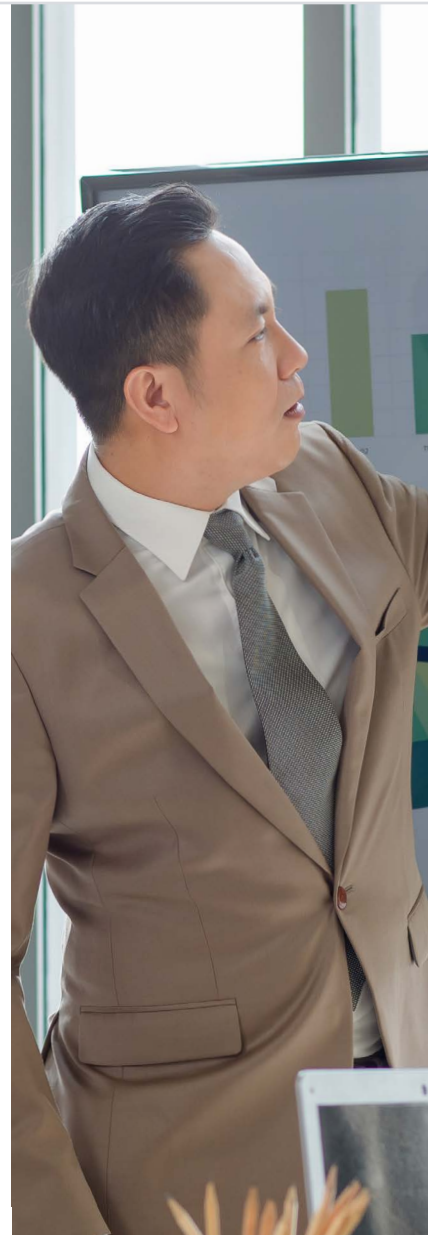
인력 개발 및 AI 활용 인재 양성

AI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정부는 근로자들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안정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사회 구조를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그려나가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인력 개발을 위해 ① 기업, ② 시민사회, ③ 정부는 다음과 같이 비전과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의 핵심 목표는 AI를 통해 기술 및 전문지식에 대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노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정부

AI 교육 및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의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부문의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에 착수할 필요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AI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일련의 정책적 장치들은, AI로 인해 지위가 위협받다고 느낄만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필요시 새로운 일자리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키는데 필수적인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예시1)Cantwell 상원의원이 미국에서 제안한 “AI를 위한 GI 법안”

미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Cantwell 상원의원은 미래 일자리를 대비하기 위해 AI 법안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기술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Cantwell 의원은 AI로 인한 변화에 대비해 노동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술 혁신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예시2)싱가포르, 전국적인 AI 스킬링 이니셔티브

IMDA(싱가포르 정보통신 관련 정부 기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한 AI 스킬링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전문가를 양성하여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합니다. 또한, IMDA는 교육 기관 및 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AI 기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시민사회와 재단, 학계

인공지능 시대에 노동자들이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포용적인 인재육성을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로써 저임금 노동자와 소외된 지역 사회도 AI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디지털 미래 프로젝트(Digital Futures Project)

Google.org는 AI의 책임있는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미래 프로젝트(Digital Futures Project)를 출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AI의 사회적, 윤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정책 설계를 돕기 위한 자금을 기여합니다. 구글은 다양한 학술 기관과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3) 기업

AI의 영향은 매우 광범위할 수 밖에 없는 특질을 지니므로,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군의 근로자들이 각자의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크게 어렵지 않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교육 파트너십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춘 교육제도 현대화

현재까지 이어진 다양한 연구 결과, 생성형 AI의 발전은 특정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고임금 직종으로의 진입 경로를 넓혀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반복적이지 않고 인지적인 작업까지도 자동화할 수 있어, 기존의 기술에 비해 더 광범위한 업무와 직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의 업무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약 3분의 1의 업무가 AI로 보강될 것이며, 이는 사람들이 AI와 협업하여 직무를 수행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AI 시대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폭넓고 근본적인 역량으로 구성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부문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교육제도를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교육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AI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극복하고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AI 기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AI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다학제적 문제 해결 능력, 효과적인 협업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 등이 요구되고, 이는 근로자들의 현재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과는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들이 AI기반의 업무로 전직을 원하거나 직무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요구되는 위와같은 이러한 능력을 취득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현행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재교육에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만한 선택지입니다. 한편, 신입 직원들이 주로 담당하던 대다수의 반복, 단순 업무는 AI를 통해 점점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퇴화”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노동 관련 AI 활용과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제도를 계속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제도는 근로자 등 학습자들이 AI를 활용해 각자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육제도는 근로자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AI를 활용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중고등 교육과정을 넘어 모든 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AI를 교육제도와 인재 양성의 핵심 요소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 코딩과 같이 생성형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좁은 범위의 교육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부문의 내실있는 교육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를 준비시키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자의 AI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이런 변화에 있어, 공통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큰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 단위의 노력의 예시로, 구글은 지난 10년 동안 9개의 커리어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최근까지 수십만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75%는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신규취업, 승진, 인상 등 긍정적인 성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Social Finance과 함께 미국에서 1억달러 규모의 커리어 서티피케이트 기금을 출시하여 학습자에게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직업 전환을 위한 지원책 마련

AI는 이미 코딩, 언어 및 글쓰기 등 기술적, 전문적 영역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주로 특권층만 활용하던 생산성 향상 전략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 용역자, 교사, 기술직 종사자 등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근로조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AI를 활용한 구인구직 통합지원 솔루션을 개발하여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예에 비추어볼 때,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그 등장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근로자 계층을 만들어 내기 마련입니다. AI의 등장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다각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AI는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인력 개발과 전직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AI 기업**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장려하여 근로자들이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에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 기업들이 직무 자격과 수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I 주도의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반영하는 종합적이고 범부문적인 교육 및 자격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유도합니다.
- 국가적 차원에서 AI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AI 분야의 현지 인재 풀을 넓힐 수 있도록 집중적인 연구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 내에 신규 연구자를 육성합니다.
- AI 전문가를 위해 투명하고 유연한 이민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인재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 AI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AI 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별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옵션을 제공하고, 저임금 노동자 및 농촌이나 소외된 지역사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정부는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 개발과 직업 전환을 촉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및 혁신 투자

인력 개발 및 AI 활용 인재 양성

**AI 도입 확산 및
접근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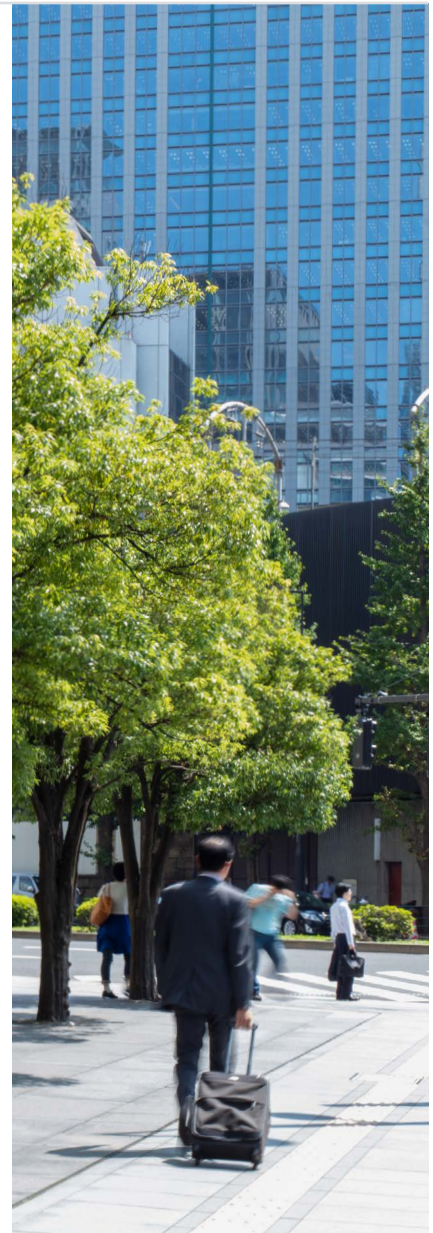
AI 도입 확산 및 접근성 강화

AI 기술의 확산과 적용을 통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부가 공공분야에 AI 도입을 확대하고, (2) 중소기업 및 전통산업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 다양한 산업군에서 AI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의 AI 도입 확대

정부가 공공분야에 AI 도입을 확대하면,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AI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AI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이 AI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AI를 통해 기술 분야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분야에서도 AI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의 AI 활용과 투자는 결국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상업용 AI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보건, 교육, 교통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AI의 도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AI 기반 홍수예보 도구와 같이 유망한 기존 기술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기존 기술에 투자하고 확대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AI 솔루션의 발전을 보여주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발족하여 공공데이터는 사람과 인공지능 모두가 읽을 수 있는 (machine readable) 방식으로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화재 감지 및 홍수 예보 시스템과 같은 AI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측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과 같은 공공 행정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I 기반 기상 예측 기술과 통관 영상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도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협력하여 AI 도입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새로운 AI 기회를 탐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기업은 AI로 강화된 서비스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주요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을 방해하는 장벽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AI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할 때 정부와 기업이 자주 겪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조달 과정의 어려움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 정책을 채택하고 투명한 조달 규정을 마련해 AI 사용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AI 관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IT 인력을 대상으로 한 내부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몇 년 전 자사의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내부 머신러닝 커리큘럼에 참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민간 부문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정부 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AI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지만, 각 기관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중앙 집중형 전문가 풀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은 최근 출범한 AI전략최고협의회 산하에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관련 정책 제언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사용 지원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은 혁신기술 도입에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AI 개발자들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이 AI를 조기에 도입·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AI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91%가 매출 증대, 고객 유치, 생산성 향상 등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적극적인 채택이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정부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와 조리로봇 같은 기술을 보급하고, AI 솔루션을 활용하여 디지털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AI 디지털 물류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배송 자동화와 실시간 재고관리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민간 기업이 초거대 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활용 지원사업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기술 도입에 다소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운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전통산업 부문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지원 방안을 고려해봄이 바람직 합니다.

- 다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소기업이 산업 전반에 걸쳐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방위적 국가 전략을 수립.
- 농업, 제조업, 보건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어 각 AI 도입이 정말 필요한지, 활용도는 실제로 높을 것인지 혹은 생각보다 실질적인 긍정효과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문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AI가 사용될만한 업무나 산업부문을 선별하여 최적화된 지원 정책을 고안.
- 중소기업이 AI를 이해하여 활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디지털 코칭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 지원과 참여 모델을 도입.
- 소외된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및 전통산업에 AI 교육 자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 AI 혁신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 저금리 대출과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본 접근성을 개선.

혁신을 지원하는 규율 체계 정비

동시에 정부는 규제 체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전통 산업이 AI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규제가 AI 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혁신을 지원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AI 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동시에,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AI를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모두가 AI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AI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용 목적에 초점을 맞춘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때 규제 요건은 각각의 구체적인 위험과 사용 사례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 AI 시스템과 비AI 시스템 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동등하게 맞춰야 합니다. AI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업무방식보다는 한층 개선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비AI 시스템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치를 기준으로 두고 AI 시스템을 평가하여서는 정책적 판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AI도 기술에 불과한바, 이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정확하게 위험과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자들이 맞춤형 요건이 아닌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된 기술 기준 적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규제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 AI 정책 방향

전 세계 정부가 AI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 보안, 혁신, 그리고 기회가 서로 상호 연관된 효과적인 AI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AI가 일상 생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I 중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AI개발을 유도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AI 기술이 악용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앞장서며, 책임 있는 AI 사용과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직원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AI 기술의 혜택과 위험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AI 기술의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균형잡힌 관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AI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AI 정책과 기술개발에 대한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AI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AI 교육과 확산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이들이 동등한 참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때 비로소 AI 기술은 모두를 위한 기술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환경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이 제공되며, 일상 생활의 편리함이 극대화되는 미래.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AI는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외됨 없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